

‘저탄소 녹색성장 세계도시의 미래’로

광주 환경엑스포 주제 ... 2011년 10월 광주전·상무시민공원 일원서 열려

관람객 100만명·생산효과 2,583억 예상

‘2011 광주세계환경엑스포’의 주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세계도시의 미래(Low Carbon Green City: Climate, Energy, Biology)’로, 행사장은 유덕동 및 광주전 일원, 상무시민공원,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으로 하는 기본구상이 완성됐다.

이 같은 기본구상은 자문회의의 보안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3일 중간보고를 통해 ‘도시 문명과 환경관’, ‘기후변화관’, ‘별종위 기종과 도시 생물관’, ‘미래 환경 도시 체험관’, ‘세계 환경 문화관’, ‘녹색 산업관’, ‘독립 기업관’ 등 모두 10곳의 전시관과 ‘107 도시 광장’, ‘도시에너지 놀이공원’, ‘자연에너지 마을’, ‘도시기후공원’ 등의 시설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시설 설치와 더불어 도시환경협약 창립회의 및 광주선언, 국제환경회의, 어린이 환경올림피아드, 세계 환경인의 날 축제 등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 100만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또 올해부터 3년 간 350억 원의 재원이 투자될 환경엑스포의 사업 수익은 산업연관분석 방법에 의해 800억 원으로 추정됐으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천5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엑스포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과의 연계, 세계 각 국가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체결, 주요 환경 관련 전시회와의 연계 등이, 엑스포 기념 조형물로는 광주전에 보행자 전용다리인 ‘녹색다리’의 설치가 각각 제안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2011년 10월 한달 간 개최되는 엑스포 기간중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UN도시환경협약 도시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하는 등 전반적인 준비작업이 착실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외국인 지문채취제도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법무부는 3일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지문채취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화국 입국심사장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 채취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으로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외국인들의 얼굴과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경제회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각 산업분야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키로 했다.

/연합뉴스



악플 추방! 선플 OK!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중일 대학생 선플 토크’에서 김형오 의장 등 참석자들과 한중일 대학생 대표들이 해버리기를 들어 선플달기 운동을 알리고 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열린 이번 토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선플운동본부 이순재 고문, 민병철 이사장, 유동근 대표, 이선진, 우희용 홍보대사 등과 이경재, 조배숙, 강성중 의원 등 다수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시 설

농식품부 ‘알박기’ 심통 해도 너무한다

농림식품부(농식품부)가 전남도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를 흔들기로 단단히 작정을 한 모양이다. 농식품부 산하 한국 농어촌공사가 지난 2일 J프로젝트의 개발예정지구인 송천지구에 대규모 농어업회사설립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농어업회사 설립계획이 발표된 후 J프로젝트의 차질을 우려해 계획취소를 요청해온 전남도와 지역민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다. ‘소구에 경 읽기’이라고 하더니 해도 너무하다.

농식품부는 현재 사업자 공모를 신청한 12개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의중이다. 애초 사업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가 도로와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10여 개 넘는 회사가 신청했다고 한다.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혜택’을 약속했다는 얘기가. J프로젝트를 ‘물 먹일’ 요량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이럴 수 있던 말인가.

농식품부는 지금까지도 송천지구의 농어업회사 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만약 현실적으로 전면취소가 어렵다면 송천지구 인근에 있는 다른 간척지로 이전해야 한다. J프로젝트의 외자유치에 찬물을 끼얹은 현 부지를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 송천지구는 미국 트러스(TRUSS)그룹 등 전남도가 45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추진중인 곳이다. J프로젝트의 성과가 달려 있는 중요한 지역인 만큼 ‘알박기’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J프로젝트는 낙후된 서남해안 지역의 성장을 이끌 동력이다. 정부가 도와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외자유치를 방해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농식품부는 더 이상 심통을 부리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여수박람회 새 위원장 ‘글로벌 인물’이 돼야

2012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장승우 조직위원장이 지난 2일 열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장 위원장 후임에 누가 선임되느냐에 지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앞으로 3년 여박에 남지 않은 여수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후임 위원장의 역할이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여수박람회는 성공개최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불투명해졌고, 박람회 핵심시설인 아쿠아리움과 콘도 건설 등 주요 민자유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중국 상하이 엑스포가 열려 여수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이 곳곳에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 조직위원장의 역할은 막중한 수밖에 없다. 우선 후임 위원장은 보다 많은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여수엑스포 기본계획에는 전체 사업비의 35%를 민자유치로 조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기침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수엑스포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그만큼 늘려야 한다. 규모를 축소해서는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 반감, 국가 이미지 훼손 등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후임 위원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해외 홍보 강화를 위해 폭 넓은 국내외 인맥을 갖추고 대규모 국제적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글로벌 인물’이 돼야 할 것이다.

“완벽 실사 ... 광주 저력 담아 내겠다”

U대회 실사 오늘 최종 리허설 가져

“준비는 끝났다. 실사단 환영만 남았을 뿐...”

(재)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와 광주시는 3일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실사단 광주 방문을 이틀 앞둔 4일 최종 예행연습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실사단이 둘러볼 광주·전남 23개 체육시설과 주요 이동경로에 환

영문구와 FISU 깃발, 광주 U대회 유치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마지막 유치보조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날 리허설에는 박광대 광주시장과 김윤석 경제부시장, 이기신 도시마케팅본부장,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실사단의 이동 경로를 따라 경기장 시설과 프레젠테이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오전 9시 시청을 출발해 동산대 체육관,



나주 종합사격장, 목포 축구센터, 영광 스포티움, 장성 흥길동체육관, 담양 체육관, 순천과인빌스 등 주요 경기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또 프레젠테이션 장소인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둘러보고 실사단에게 브리핑하는 것과 똑같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상황별 대처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모든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도시 접근성이나 체육시설 등 지난해 지적됐던 분야를 철저히 보강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15년 하계 U대회 개최 후보지 실사는 대만 타이페이(4월3일~5일)→광주→캐나다 에드먼턴(5월1일~4일)순으로 진행된다. 광주 실사단은 스테판버그 FISU부위원장(스웨덴)을 비롯 루사야노 카브랄(브라질), 말립베트 라레트(남아공), 케말 타머(터키), 히사토 이가라시(일본)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광주에 머무는 3박4일 동안 U대회 개최를 위한 도시 환경과 체육시설 등 도시의 인프라와 개최 역량, 시민들의 열기를 집중 점검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 “영세 자영업자에 10조9천억 지원”

정부는 3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폐업자 업종전환 및 취업을 돕기 위해 10조9천95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영세 자영업자 실업.생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지원계획에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4조412억원을 늘려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확대 10조5천958억원 ▲폐업자 업종전환 및 취업지원 강화 2천

“유전개발 입찰 한국 배제” 이라크 석유부 장관

이라크 석유부 장관이 루르드자치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한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에 대해 입찰 배제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알-사흐리스타니 이라크 석유장관은 2일 바그다드에서 하태운 주이라크 한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APP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골치 아파서 '死月국회' 하기로...

진도~제주도 3천억대 송전선 사업 LS전선 수주 사실상 확정

서울지법 佛사 가처분신청 기각

LS전선이 진도와 제주도를 잇는 3천억 원대 해저 송전선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 부장판사)는 3일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 산업체 ‘넥상스 프랑스 SAS’가 사업을 발주한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입찰철회신청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넥상스가 정식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본안 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연합뉴스

박관용·김원기 내주 소환

대검, 송은복·이정욱씨 구속기소

‘박연차 리스트’ 수사

검찰은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에서부터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의혹도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음 주 홍콩 사법당국으로부터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APC 자금 관련 계좌를 넘겨받는 대로 수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비자금 규모와 사용자, 특히 연씨에게 500만 달러가 넘어갔는지와 국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검찰의 자료 검토 속도에 따라 연씨는 물론 2007년 8월 서울 S호텔에서 박 회장과 함께 ‘3자 회동’을 가진 강금원 창신생명 회장도 정승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줄소환될 전망이다.

강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3자 회동 때)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박 회장이 ‘홍콩에 비자금 500만 달러가 있으나 가져가라’고 제안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해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작년 3월 박 회장과 연씨의 거래를 알았지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3자 회동은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몰랐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虎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 부 2200-672	문화홍보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34	어문제작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